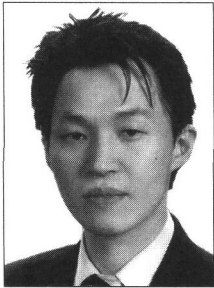


육우대책, 탈출구 아닌 돌파구 찾자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샌드위치’란 말을 들으면, 한우와 수입육 사이에 끼여 있는 육우의 처량한 모습이 떠오른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육우의 슬픈 자화상이다. 소 사육두수가 300만두인 상황에서 육우는 고작해야 15만두 내외다. 몸짓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도 언제나 한우위주의 정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우정책마저도 이제 와서 호들갑에 뒷북을 치고 있는 꼴이 되 버렸다.

만 원짜리 송아지 뉴스가 나오자 일반 시민들은 정말 송아지 한 마리가 만 원인지, 애완용으로 살 수 있는지 문의가 빗발쳤다. 이 와중에 정부는 ‘송아지 요리개발’이라는 순진한 정책을 내놓았고, BSE 발병 이후 8년만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도 재개했다. 더욱이 만 원짜리로 전략한 송아지를 두고, 낙농가 손실은 330만원에 불과하다며 어느 정도 손실은 감내해야 한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이 언론을 탔다.

코너에 몰린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소 값 하락 전망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율도태를 추진해왔다. 결국 정부도 나름 노력은 했지만 소 사육농가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다. 앞으로 소비확대와 한우 암소도태 확대 추진,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소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소 값 폭락과 관련하여 축산농민들의 소 상경 시위가 일자 정책자금 지원 축소, 조사료 쿠퍼 배정 중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중단,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정부도 할 만큼 해왔는데, 소 값 폭락은 정부 말 안들은 농가 탓으로 돌리고 있고 현장과의 소통은 뒤로한 채 축산농민의 정당한 시위는 공권력으로 막겠다니 씩씩할 뿐이다.

육우를 들여다보자. 지난해 육우 연간 도축두수는 94천두다. 현재 장병 1일 기준 9그램(연간 약 1만두)이 군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수입육 9g 전량을 육우로 대체키로 했고, 추가로 군납물량 확대도 협의하고 있다. 일단 2~30% 물량이 군납으로 확보되었다. 현재 소 값 폭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우로써는 탈출구인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육우대책은 탈출구가 아닌 돌파구에 있다.

한우와 수입육 사이에서 육우는 제대로 얼굴찾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직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번 위기는 기회다. 육우는 낙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육우 판매장 확대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점포도 현재 9개소에서 연말까지 40개로 확대하고, 낙농조합의 육우전문매장도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아쉽게도 현재 농협 하나로 마트의 점포 9개소는 도매 식자재판매만 있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판매는 없는 실정이다. 소매판매코너가 일부 개설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졌다. 협회는 육우분과위원회와 함께 육우홍보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은 육우를 구입하고 싶어도 어디서 사야하는지도 모르고 살 곳이 없다고 푸념이다.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우리 육우는 소비처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육우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대책이 최우선이다. 생산자 중심으로 농협 하나로클럽(마트), 낙농조합, 영농조합, 협회가 나서서 육우 직판체제에 구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만 원짜리 송아지 방치는 낙농가, 육우농가 모두에게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육우가 정정당당하게 대접받고, 육우송아지가 귀한 대접받는 시작은 지금부터다. ☺